

□ 특집 □

지역정보화 사업의 추진방향

손 연 기*

◆ 목 차 ◆

- | | |
|------------------------|--------------------|
| 1. 지방화와 정보화 | 3.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 |
| 2. '지역정보화'의 개념과 전략적 의미 | |

1. 지방화와 정보화

오늘날 우리사회는 지방화와 정보화라는 두가지 큰 흐름을 함께 맞이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작년 6·27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실시와 함께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섰다. 본래 지방자치란 지방주민의 뜻에 따라 法人格을 갖는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복지와 관련있는 사무를 주민이 부담하는 재원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지방행정을 의미한다. 이같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요소는 ① 자치단체를 주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住民意識, ② 법률이 정하는 폭넓은 자치단체의 自治權, ③ 지역행정과 국가행정간의 명확한 領域區分, ④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충분한 자부적 財源確保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安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의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아울러 지방

화는 각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자주성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맥락에서는 국가권력의 분권화를 의미하며, 경제적 의미에서는 지역경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에 의해 생성된 정보화의 물결로 인해 사회의 제반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정보화는 정보의 생산, 가공, 유통, 저장 및 이용과정고도화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국가사회 운영과 기업경영 효율화의 전략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즉 정보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수단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타영역과의 발전적인 결합을 통해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지방화와 정보화의 전략적 결합을 상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지역정보화'라고 하는 개념적인 영역이다. 아울러 '지역정보화'는 지역개발,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정회원 :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정책연구부장

과 균형발전된 정보사회의 실현이라는 상위목적에 종속되는 정책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세계 각국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국가별로 차별성있는 ‘지역정보화’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가고 있다. 또한 지방화와 정보화의 물결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두 조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조화롭게 순용해 나가느냐하는 것이 21세기를 맞는 핵심적인 과제로서 제기 되어 있다.

2. '지역정보화'의 개념과 전략적 의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급속한 사회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변화의 속도와 폭은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정보화의 진전이 앞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정보화의 지역 발전에 대한 유효성 및 ‘지역정보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정보화’는 ① 지역산업의 정보화, ② 지역생활의 정보화, ③ 지역문화의 정보화, ④ 지역행정사무 및 서비스의 정보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정보화를 통한 지역개발 또는 지역발전’), ‘정보통신기술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골격으로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미 일본에서는 ‘텔레토피아’, ‘뉴미디어커뮤니티’, ‘인텔리전트시티’, ‘그린토피아’ 등의 구상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정보화’는 정보화를 서울 및 대도시 지역으로부터 낙후지역으로 확산한다는 의미(‘정보화의 지역적 차원으로의 확산’)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중

심으로 사회 여러부문에서 정보화가 추진되어 왔으나 정보자체가 서울과 대도시 등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정보화도 이들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의 경우 정보화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보화의 편익을 전국의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정보화를 실질적인 국가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차원의 동시적 정보화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하며, ‘지역정보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즉, 정보화는 지역적 차원에서 자치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급변하는 환경변화에의 능동적인 대응,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책개발의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3.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정보화’는 더 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다. (정보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과제로서는 효율적이고 자주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정보화수준은 미미하며, 그동안 ‘지역정보화’를 주도해 온 중앙정부에서조차도 부처별로 서로 다른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 저하와 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원칙적인 차원에서 그간의 ‘지역정보화’사업이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정보화’사업은 종래의 양적 성장 전략과 시장지향적인 확산전략을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30여년간 지속되어온 효율성과 능률성 위주의 중앙집권적 하향적(Top-Down)방식을 벗어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주체가 되는 상향적(Bottom-Up)방식으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본래

지역발전이란 지역사회의 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기회를 증대시키는 사회구조적인 발전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삶의 질'은 육체적·물질적인 향상과 정신적 내면생활의 여유를 포함하며 '삶의 기회'는 향상되는 삶의 질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배분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발전은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정치적인 면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영향력의 증대, 경제적인 면에서는 산업화와 자원개발, 산업기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면에서 교육시설의 개선 및 증설, 의료시설의 확대, 교통편의의 증대, 환경문제의 해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보화를 이와 같은 내실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역정보화'정확도 그 추진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이념이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보휴머니즘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역정보화'는 궁극적으로 정보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휴머니즘을 추구해야 한다. 즉, 인간성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야 하는 바 이는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풍요롭고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정보민주주의의 확립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용자가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정보에의 평등한 접근과 활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사회참여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경우 지역정보망(Free-Net)에 대한 접근이 전자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울러 지역주민간에도 정보이용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지역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복지사회의 실현이다. 지역주민의 인간적 삶의 제조건을 정비하되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고 자칫 정보사회에서 낙오되기 쉬운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에게도 '정보화'의 혜택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이념이 실현될 때 '지역정보화'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의 격차 해소에 공헌하여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기기, 통신망, 정보서비스업 등의 내수기반을 확장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인 정보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헌하며, 지역주민을 정보시대의 시민으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물적, 인적 자원의 한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역정보화'사업의 초기단계에서의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사업은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지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한편 지방은 과거의 지역개발사업에서와 같이 중앙에만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주체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즉, 중앙정부의 결정과 지원을 기다리기 보다는 학계, 전문가와 지역기업가, 시민, 관련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지역정보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능동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보마인드 확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에 대한 다양한 홍보·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정보의 발신과 수신 주체로 될 수 있도록 정보이용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통신기기의 보급 확대, 지역정보망 구축 등 지역적 차원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은 일정한 정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보다는 적용될 생산현장이나 분배, 소비현장의 특징과 목적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개발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지역주민의 일반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간 정보자원의 공유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세째, '지역정보화'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역의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적 다양성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는 무엇보다도 해당지역의 지역주민이나 자치단체 등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지역폐쇄적인 정보화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장벽없이 정보를 발신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네트워크의 속성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현단계에서는 인터넷과 지역정보망의 연계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몇가지 사항들을 원칙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사업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과거 몇 년간의 실험을 토대로 변화된 정보환경을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보화'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손연기

- 1984 고려대 심리학(학사)
- 1988 미국 유타 주립대 사회학과 (학사)
- 1992 미국 텍사스주립대 사회학과 (석사)
- 1996 미국 텍사스주립대 사회학과 (박사)
- 현재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정책연구부장

우송산업대학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